
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

2022. 2. 10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배경 | 1 |
| II. 그간의 실적 및 주요 성과 | 2 |
| 1. 창업·벤처 영역 | 2 |
| 2. 소상공인 영역 | 3 |
| 3. 일반 중소기업 영역 | 4 |
| III. 중소기업 여건 점검 및 성과확산 전략 | 5 |
| IV. 10대 분야 추진과제 | 7 |
| 1. 경제구조 등 환경변화 대응 강화 | 7 |
| 2.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 | 9 |
| 3.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활력 회복 | 11 |
| V. 향후 계획 | 13 |

I. 추진 배경

◆ '21년은 문재인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'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'이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, 고용 회복 등 성과 지표를 통해 가시화

○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.9% (689만개), 기업고용의 82.7% (1,744만명), 기업매출의 48.7% (2,732조원)를 차지 ('19년 기준)

○ 우리 경제는 기업활력 회복 등에 힘입어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회복

* '20~'21년 평균성장률 (1.5%)이 최고 수준 (OECD)

- 수출 (6,445억달러)·무역규모 (1.26조달러) 역대 최고치 경신 → 中企 수출도 신기록 (1,171억달러, +16.2%)을 달성하면서 총수출 호조에 일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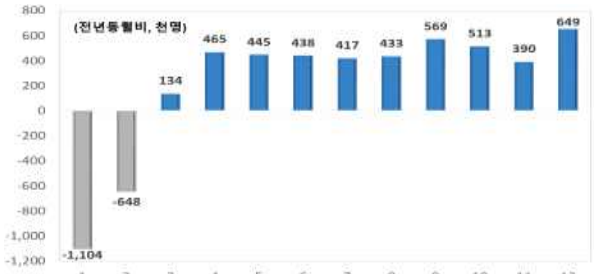
-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9개월 연속 +50만명 이상 증가 → 中企 취업자도 10개월 (3~12월) 연속 증가하여 전반적인 고용회복*에 기여

* '21.12월 기준 코로나 이전 고점 ('20.2) 대비 100.2% 회복 ('22.1 고용동향)

중소기업 수출 추이 ('10~'21, 관세청·중기부)



중소기업(300인 미만) 취업자수 추이 ('21, 통계청)



◆ '22년 완전한 경제 회복·도약을 위해 중소기업 성과를 지속·확산할 필요

○ 금년內 위기극복 및 완전한 경제 정상궤도 복귀를 위해서는 생산·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

○ 중소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* 등을 감안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별하여, '22년에도 중소기업 성과 확산에 만전을 기할 필요

* '22년 中企애로(%): 원자재價 39.0, 내수부진 26.0, 인력난 21.8, 자금난 19.6 등('21.12 중기중앙회)
'22년 추진 필요과제(%): 적극적 금융세제 지원 41.6, 내수 활성화 36.8, 인력난 해소 26.8 등

- 특히, 탄소중립·ESG, 글로벌 공급망 (GVC) 재편 등 최근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차질없는 준비도 필요

→ 그간의 중소기업 성과·여건 점검을 통해 성과 확산방안을 마련

II. 그간의 실적 및 주요 성과

1 창업·벤처 영역

◆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, 기술·청년 창업열기 확산 등을 통한 제2벤처붐 안착

□ **(제2벤처붐 안착)** '17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벤처투자 등을 바탕으로 제2벤처붐이 확실하게 자리매김

- '21년 벤처투자가 7.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*, 특히 비대면 분야가 4.1조원으로 50% 상회 (52.2%)

* '17년(24조원) 대비 3.2배 증가, 피투자기업도 '17년 1,266개에서 약 2배 증가한 2,438개 기록

〈최근 5년간 벤처투자 실적(억원)〉



- '17년 대비 '21년 유니콘기업 (기업가치 1조원 이상)이 5배로 증가*, 예비유니콘기업 (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)도 3.4배 증가**

* 유니콘기업(누적, 개): ('17) 3 → ('18) 6 → ('19) 10 → ('20) 13 → ('21.9) 15

** 예비유니콘기업(누적, 개): ('17) 115 → ('18) 158 → ('19) 235 → ('20) 320 → ('21.9) 392

⇒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벤처·스타트업의 고용 증가율 (10.2%)이 전체 기업 (3.4%)의 3배로 벤처·스타트업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

* 벤처기업 고용현황 (만명): ('20.6말) 66.0 → ('21.6말) 72.7 (+10.2%)

□ **(창업열기 확산)** 혁신인재들의 도전과 정부의 창업단계별 (준비-초기-도약기)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양적·질적 개선

- 청년창업* 및 기술창업** 모두 역대 최고치 달성

* 청년창업 (만개): ('17) 42.6 → ('18) 44.3 → ('19) 44.0 → ('20) 49.1 → ('21⁹) 51.0

** 기술창업 (만개): ('17) 19.9 → ('18) 21.2 → ('19) 22.1 → ('20) 22.9 → ('21⁹) 23.8

- CES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 ('19. 5 → '22. 60개) 및 Forbes (美) 선정 글로벌 리더 증가 ('16. 5 → '21. 15개) 등 국제사회도 긍정적 평가*

* 전세계 43개국 중 '실패 두려움' 최저치 기록 ('19~'20 연속, GEM, '21.5)

세계경제포럼(WEF), 한국이 세계적 혁신 거점 거듭난 비결은 스타트업 (22.1)

□ **(법·제도 정비)** 「벤처투자법」 제정 ('20.2),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(CVC) 허용 ('20.12) 등 벤처투자 제도 정비도 병행

◆ 재난지원금, 손실보상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·회복과 디지털화 촉진

- **(위기 극복)**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, 손실보상 체계 구축, 특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기여
 -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**16.2조원** 재난지원금 지급 (1,033만명, '20.9~'21.12)
 - * 4차례 지급 (조원): 새희망자금(2.8), 버팀목자금(4.3), 버팀목플러스자금(4.9), 희망회복자금(4.2)
 - 세계 최초로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 ('21.7)하고, **빠르고 간편한 방식의 보상 실시** ('21.10~'22.2.3, 1.9조원)
 - * 방역지원금 (3.2조원) 및 방역물품지원금 (0.1조원) 지원도 병행 ('21.12~)
 - 소상공인 정책금융 (융자+보증)을 확대 ('17. 13.9 → '21. 28.3조원)하고, 소상공인·중소기업 대상 **총 238.3조원** 규모 만기연장 시행 ('20.4~'21.12)
- **(디지털 전환)** 급변하는 소비·유통 환경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
 - 스마트상점·공방 등을 집중 육성하여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
 - * 스마트상점 (천개): ('20) 4 → ('21) 13 / 스마트공방 (개): ('20) 82 → ('21) 599
 -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 ('20~'21, 114곳)하고, 온누리상품권 발행 ('18. 1.5 → '21. 3.2조원)에 더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도입 ('19.9)
 -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간편결제 (제로페이, '19.1)의 결제액 및 가맹점수 지속 증가
 - * 결제액 (누적, 억원): ('19) 767 → ('20) 11,529 → ('21) 36,229
 - * 가맹점수 (누적, 만개): ('18) 1.6 → ('19) 32.4 → ('20) 72.9 → ('21) 138.3
- **(정책체계 혁신)** 소상공인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육성하고, 개별 상인 단위에서 상권 단위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
 - 「소상공인기본법」을 제정 ('20.2)하고, 소상공인지원센터 ('17. 59 → '21. 70개) 등 소상공인 현장 조직을 확대
 - 쇠퇴하는 지역 상권을 부활시키고 (상권르네상스, '18. 3 → '21.12 28개), 지역 맞춤형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(「지역상권법」 시행, '22.4)

◆ 기술경쟁력 제고, 경영애로 완화, 상생 협력 등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

- **(기술경쟁력 제고)** 중소기업 전용 R&D를 2조원대로 확대하고, 스마트 공장 2.5만개 ('21.12) 구축 → 생산성 향상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
 - * (중기R&D 주요성과, '15~'19) 수출 420.8%↑, 매출 32.2%↑, 영업이익 19.0%↑
 - ** (스마트공장) 생산성 28.5%↑, 품질 42.5%↑, 원가 15.5%↓, 납기준수 16.4%↑, 고용 2.6명↑, 매출 7.4%↑, 산재 6.2%↓ ('20.12 산업연, '14~'18년 도입기업 7,903개社 대상)
- **(경영애로 완화)** 공공구매 확대, 임금격차 완화 등 추진
 -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지속 확대, '20년 역대 최대 달성
 - *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액(조원): ('17) 92.2 → ('18) 94.0 → ('19) 105.0 → ('20) 116.3
중기제품 구매비율(%) : ('17) 74.8 → ('18) 76.2 → ('19) 77.8 → ('20) 79.8
 - 성과공유, 내일채움공제* 등을 통해 임금 격차 완화**에 기여
 - * ('21년 실적, 누계) 내일채움공제 70,037명 27,476개사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35,898명 46,728개사, 청년내일채움공제 507,370명 116,213개사
 - ** 중소/대기업 임금 비율(%), 기업체노동비용조사 : ('16) 67.9 → ('18) 71.5 → ('20) 74.4
- **(규제자유특구 지정)** 총 6차례 29개 특구를 지정 ('19.7~'21.12), 신기술 세부실증사업 73개에 대해 144개 규제특례를 허용 → 지역혁신 촉진
 - * 특구 내 2,409명 일자리 창출, 투자유치 2조 3,572억원 (VC투자 포함), 기업유치 205개사, 공장설립 19개사 등 성과 창출 ('21.12)
- **(상생협력 확산)** 자상한 기업* 등을 통해 상생협력 대상을 확대 (협력사 → 비협력사, 소상공인 등)하고, 상생협력기금·상생결제** 지속 증가
 - * 자발적 상생기업 ('자상한기업' 35개사, '19 ~ '21.12)과 협약을 체결하여, 비협력사·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, ESG 등 지원 (123조원 규모)
 - **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이 크게 증가('17~'21, 약 1.2조원) 하고, 상생결제액도 142.8조원으로 역대 최고치 달성

◇ 창업·벤처 및 소상공인 영역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및 위기 극복에 주력할 필요

◇ 상대적으로 높은 경영 불확실성에 처한 일반 중소기업 영역은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시점

Ⅲ. 중소기업 여건 점검 및 성과확산 전략

- **(경제구조 전환)** 탄소중립·ESG, 공급망 재편 등 경영환경 변화 가속화
 - * 78%의 글로벌 대기업이 탄소중립 미이행 협력사 대체 의향 응답 (스탠다드차타드, '21.6)
- 탄소중립, ESG 관련 중소기업의 인식과 대응은 여전히 부족
 - * 탄소중립 대응현황 (중진공 '21.2): 준비됨 (준비중 포함) 15.1%, 필요성은 인식 80.6%
 - ** ESG 대응수준 (전경련, '21.2, 선진국 10 대비): (대) 7, (중견) 5, **(중소) 4**
-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위협도 여전
 - * 원가상승분 납품대금 반영 정도(%, '21.9 중기중앙회): 전부 6.2, 일부 47.9, 未반영 45.8

→ 【전략 1】 경제 구조·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회로 활용

- **(생산·성장 둔화)** 디지털화, 사업전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로 대기업에 비해 생산 증가가 정체*되고, 지역 경제성장도 둔화**
 - * 대/중기 제조업 생산 증가율(%, 동기비): ('21.3Q) 6.6/△0.13 → ('21.4Q) 7.4/1.2
 - ** 지역 총생산 연평균 증가율 ('17~'19, 통계청): (수도권) 3.8%, (비수도권) 1.7%
- 특히, 국내 中企의 65.5%는 디지털화를 준비하지 않는다*고 응답하였으며, 사업전환에 대한 노력도 미흡**
 - * 디지털화 준비 中企(%, '21.12 중기중앙회): (전체) 16.7, (수출中企) 20.6 (내수中企) 10.5
 - ** 제조 소기업 중 92.3%는 향후 사업전환 계획이 없음 ('20, 중기 실태조사)

→ 【전략 2】 디지털화사업 전환, 지역 혁신 등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

- **(경영상황)** 중소기업은 신규 판로 발굴, 자금 확보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,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준비도 필요
 - * 코로나로 인한 타격(피해) 여부(%) : 받고 있음 60.2, 받고 있지 않음 23.2
 - ** '22년 핵심 경영전략(%): 신규 거래처·판로 발굴 47.6, 운영자금 확보 39.4, 원가 절감 및 사업구조조정 27.6, 경영리스크 관리 27.4 등 ('21.12 중기중앙회)
- 또한, 최근 대형 산업재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*(1.27)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역량 제고 필요
 - * 시행: (50인 이상) '22.1월~, (5~49인) '24.1월~, (5인 미만) 적용 제외

→ 【전략 3】 수출·판로, 자금, 인력 등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활력 회복

〈 중소기업 10대 분야 추진과제 〉

| | |
|------------|--|
| 비 전 | <p>“중소기업”을</p> <p>대한민국 경제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</p> |
| 목 표 | <p>「3대 전략 - 10대 분야 추진과제」</p> <p>집중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성과 확산</p> |



| 전략 | 【전략 1】 환경변화 대응 | 【전략 2】 성장기반 확충 | 【전략 3】 경영여건 개선 |
|----------|---|--|--|
| 중점 과제 | <p>① (글로벌 공급망)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단별 총력 지원 및 제도 개선</p> <p>② (탄소중립·ESG)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 약 2배 확대 및 ESG 지원 강화</p> <p>③ (상생협력) 대·중소 기업 상생 및 공정 경쟁 생태계 조성 주력</p> | <p>① (디지털 전환) 제조업·서비스업의 스마트화 전폭 지원</p> <p>② (연구개발) R&D부터 기술분쟁 대응까지 패키지 지원 강화</p> <p>③ (구조개선) 新사업진출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기반 정비</p> <p>④ (지역혁신) 규제자유 특구 등을 통한 지역 혁신 기업 육성</p> | <p>① (수출·판로) 중소·중견 수출금융 97조원 공급 및 판로 지원</p> <p>② (자금공급)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자금 184조원 공급</p> <p>③ (맞춤형 인력) 기업·인력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 조성</p> |

IV. 10대 분야 추진과제

1 경제구조 등 환경변화 대응 강화

① [글로벌 공급망]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단별 총력 지원 및 제도 개선

○ (수단별 지원)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

- ▶ (금융) 수입대체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 신설*(수은, '22. 15조원) 하고, 공급망 재편 대응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공급 확대(산은·기은 등)
* ①원자재확보, ②수입대체, ③물류기반, ④글로벌생산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
- ▶ (세제) 희토류·요소수 등 국내 공급망 취약품목의 국내 대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·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*('22.1/4)
* (R&D) 신성장·원천기술로 추가하여 일반 연구개발(중소 25%) 대비 세액공제 공제율(30~40%) 우대 (시설투자) 신성장사업화시설로 추가하여 일반 시설투자(중소 10%) 대비 공제율 우대(+2%p)
- ▶ (정보) 조기경보시스템(EWS)을 가동하여 공급망 위기징후를 신속히 전파하고,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(코트라 등)를 통한 정보 심층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('22.2~)
- ▶ (물류) 정기항차 증소화주 선복량('21. 550→'22. 900TEU) 및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('21. 142→'22. 170억원)를 확대하고, 온라인 수출기업에 특송물류 할인(최대 66%) 신설
- ▶ (조달) 비철금속 60일(現 58일), 희소금속 100일(現 57일)로 비축일수를 확대하고, 할인 방출시 소기업 물량 우선 확보 지원('22.上)

○ (납품단가) 일정요건* 충족時 표준계약서** 사용을 권장하여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시범사업 운영 ('22.上)

* 원자재 활용비중이 높고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경우 등 (예시: 알루미늄, 구리 등)

** (예시) 연동 대상 원자재, 기준가격, 납품단가 조정시기, 방식 등 명시

② [탄소중립·ESG]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 약 2배 확대 및 ESG 지원 강화

○ (탄소중립) 예산·법 등 기반 마련을 토대로 공정·경영 전환 지원

- ▶ (기반)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 확대('21. 2,397→'22. 4,744억원) + 탈탄소 법적 근거* 마련 추진 + 기존 온실가스 통계에서 중소기업 통계를 별도 구분('22.上)
* 「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특별법」 발의('21.1, 강훈식 의원안) → 국회 산중위 법안소위 회부('21.3)
- ▶ (공정) 사업장 탄소중립설비*('22. 879억원), 클린팩토리**('22. 236억원),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('22. 55억원) 등 친환경 설비 구축전환 자금 지원을 2배이상 확대('21. 758→'22. 1,875.5억원)
*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자금 지원
** 청정생산기술을 통해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생산공정 구축 지원
- ▶ (경영) 고탄소 10개 업종 위주의 제조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·기술 등 연계지원하는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확대('21. 100→'22. 172억원)

- **(ESG) 중소기업 맞춤형 ESG 경영 체크리스트를 세분화¹⁾** ('22)하고, ESG 교육·컨설팅²⁾ 및 수출기업 지원³⁾ 확대

1) ('21.11) 공통지표 23개 → ('22) 수출기업용, 고탄소업종용, 대기업 협력사용 등 세분화

2) CEO 인식개선 교육, 중소기업 혁신바우처('22. 10억원) 활용 컨설팅 신설 등

3)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(최대 1억원) 참여 우대, '중소기업 ESG 수출가이드북' 발간, 공급망 ESG 실사 대응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및 대·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 운영 등

- '정보제공-교육-역량진단-전략컨설팅'全过程를 지원하는 K-ESG 경영지원 플랫폼을 제공('22.上)

3 [상생협력] 대·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주력

- **(자상한기업*)** 탄소중립, ESG경영 등 핵심분야에서 '22년 10개社 신규 선정 및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('상생협력법' 개정, '22.下)

* 기업의 역량·노하우 등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

- **(협력이익공유제*)** 도입 실적을 동반성장지수에 신규 반영 → 확산 추진

* 대기업·공공기관과 협력사 간 공동노력으로 달성한 협력이익을 계약에 따라 공유(~'22. 200개사)

- **(대·중기 기술협력·나눔)** 대-스타 플랫폼* 및 기술나눔** 활성화

* 대기업의 기술문제를 스타트업 경연을 통해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

** 대기업 미활용 우수기술을 중소·중견기업에 무상 이전('22년 대기업 등 제공기관 확대 예정)

- **(공정경쟁)** 납품대금 조정 실효성을 제고하고, 피해구제 강화

- ▶ **(납품대금 조정)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도 협의 주체로 추가** ('상생협력법' 개정 추진, '22.下)

* (現) 수탁기업, 중소기업협동조합, 중소기업중앙회 → (추가) 중소기업 관련단체

- 수탁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의 협의 신청시 필요한 신청요건 완화* ('상생협력법 시행령' 개정 추진, '22.下)

* (현재) 재료비·노무비·경비 중 1개 이상 지표의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% 이상 → (개선 예시) 재료비·노무비·경비 증가액의 합산분이 잔여 납품대금의 일정수준 이상

- ▶ **(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) 최종 소비자, 중소기업 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조합 공동행위 허용범위 확대 여부·방안 검토** (공정위 협의)

- ▶ **(피해구제) 하도급·가맹 분야 등 상임조정위원회 신설*로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, 하도급 분쟁시 감정평가 절차 도입 등 추진**

* 조정 이용률이 높은 공정거래, 하도급 및 가맹 분야에 상임조정위원회 신설

- ▶ **(표준계약서 보급) 비대면 소비 확산 추세를 반영하여 온라인·TV홈쇼핑 분야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·보급** ('22.1/4)

* [온라인쇼핑물] 경영간섭 금지조항, 직매입 대금지급 기한 등 추가
[TV홈쇼핑] 방송제작비용과 인건비의 범위 명확화, 방송 횟수 표기 등

- ▶ **(가맹·대리점주 보호)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으로 대표성 강화** (가맹사업법 개정), **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추진** (대리점법 개정)

- 가맹본부가 광고·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('22.7 시행 예정)에 따라 동의비율 등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

1 [디지털 전환] 제조업·서비스업의 스마트화 전폭 지원

- (스마트공장) 스마트공장 5천개 추가 확대 ('21. 2.5 → '22. 3만개)
 - 사물인터넷 등 기술활용 공장 고도화에 '22년 2,000억원 이상 투입하고, 유사 공정·업종 기업들에 대한 업종별 솔루션 제공 (230억원, '22)
- (스마트서비스) ICT 기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 ('21. 60 → '22. 113.8억원)
- (스마트물류) 항만배후단지 내 디지털 물류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체에 미래형 물류인프라 제공
- (협업생태계) 「산업디지털전환법」 시행('22.7)에 맞춰 협업지원센터 지정(중앙),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, 밸류체인 DX R&D 지원 등 촉진
- (신기술 바우처) 중소기업 수요에 걸맞은 신기술 (데이터·인공지능·클라우드) 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 ('21. 1,882 → '22. 2,332억원)

2 [연구개발] R&D부터 기술분쟁 대응까지 패키지 지원 강화

- (R&D지원) 디지털뉴딜·소부장·탄소중립 등 중점투자 분야와 연계하여 R&D 신규과제 지원 대폭 확대 ('21. 4,394 → '22. 6,664개)
 -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정부R&D 민간부담률 하향 조정(中企 20~35 → 10~20%) 및 기존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을 '22년말까지 추가 연장
 - 연차보고서 제출시기 연장 (1개월전 → 연차종료일), 진도점검 폐지, R&D지원 시 재무요건 적용 면제대상 중소기업 확대* 검토
 - * (종전) 3년 이하 기업 → (개선) 최초 지원 시 7년 이하 기업도 포함
- (기술보호) R&D 이후 기술분쟁 예방·대응 등까지 촘촘히 지원

▶ (분쟁예방·대응) 특허기반 연구개발(IP-R&D) 지원('21. 385 → '22. 400억원) 및 '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컨설팅('21. 109 → '22. 149억원)' 대상·비용지원 한도 확대*

*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침해를 예방

** (대상) 수출 중소중견→외국기업, 대기업, NPE와 분쟁 중인 중소중견기업 / (한도) 연 1→2억원, 최대 3년

▶ (정책보험)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시 법률소송 비용부담*을 완화하기 위해 「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」 도입

* 보장금액 범위 내 포렌식, 기술가치 평가, 심판 및 변호인 선임 등 소요비용 보장

▶ (기술거래 활성화) 중소기업 기술거래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(47.6억원, '22년 신설)하고, 대·중소 상생협력 기술거래시스템(2win-Bridge)을 전체기업으로 확대*

* (현재) 대(수요자)↔중소기업(공급자) → (향후) 대·중견·중소↔중소기업, 범용성 확대

③ [구조개선] 新사업진출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기반 정비

- (사업재편·전환)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법을 개정하고, 승인 기업에 대한 자금·R&D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('22.上)
 - ▶ (사업재편) 기업활력법상 지원 범위에 탄소중립·디지털전환 추진기업 추가 + 연구개발 사업지원 확대('21. 100→'22. 180억원), 사업재편혁신펀드 750억원 조성
 - ▶ (사업전환) 사업전환법상 지원 범위에 유망품목 전환, 사업모델 혁신 등 추가* + 전환자금 확대('21. 1,000→'22. 2,500억원), 사업전환 컨설팅 신설(400개사) 등
 - * (기존) 업종변경·추가만 지원 → (개선) 동일 업종 내에서 유망 품목·서비스 도입, 사업모델 혁신까지 인정
- (노동전환) 노사상생의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 사업전환고용안정협약 지원금('22. 50억원)*, 노동전환 지원금('22. 52.6억원)** 등 신설
 - * 사업재편·전환 기업의 시설·기숙사 임차 등 조치시 사업주 투자금을 지원(50개소)
 - ** 노동자 전직지원 사업주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(2,300명)
- (구조조정)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소각대상 확대* 및 기업구조혁신펀드 인센티브 개선**, 구조혁신지원센터 설립('22.2) 등 추진
 - * 대위변제 후 5년→3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
 - ** 중소기업 의무투자비율(35%) 초과(+10%p) 달성시 운용사에 추가성과보수 지급 등

④ [지역혁신] 규제자유특구, 지역혁신거점 등을 통한 지역기업 육성

- (혁신거점 육성) 규제자유특구, 산업단지·산학융합지구 등 지역별 거점 육성
 - 규제자유특구 지정(5개 내외, '22.上) 및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*
 - * 유사분야 규제자유특구 간 기술교류·공동사업화·규제법령 정비 공동대응 등 추진('22.上)
 - 디지털·그린 뉴딜, K-BIO와 연계하여 거점별 지역혁신 인프라 강화*
 - *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: '21년 50개 과제 1,123억원 → '22년 77개 과제 1,636억원
- (지역 벤처투자) 자생적 지역 투자생태계 구축을 위해 '엔젤허브, 엔젤징검다리, 지역뉴딜 벤처펀드' 등 지방전용펀드(총 4,700억원 이상) 조성
 - 특히, 지역뉴딜 벤처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('22. 600억원)를 통해, '21년 조성권역(부산, 충청, 경남·울산) 투자를 본격화하고 신규지역 발굴
- (지역기업 육성) 지역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발굴·육성*('22. 100개) 하고,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 기능 강화
 - * (정부) 협업과제기획, R&D(최대 6년간 20억원), 정책자금 우대 및 보증료 감면 등(14개 시·도) 산단·지식산업센터 입주, 지역투자보조금 우대, 시험장비 지원 등

1 [수출·판로] 중소기업 수출금융 97조원 공급 및 판로 지원

- (수출)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 유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 확대
 - 중소기업 대상 무역보험한도·보험료 우대, 기술개발·시설확충 등 수출금융 공급 확대('21. 89 → '22. 97조원, 무보·수은)
 - 수출 바우처를 5,000개사 이상 지급('22. 1,553억원)하고, 온라인·비대면* 중심 수출마케팅, 현지마케팅 애로 해소** 집중 추진
- * 화상상담(6.5만건), 해외전시회(100회), 온라인·O2O전시(20회), 현지 온라인유통망 마케팅(4천개사)
- ** 무역관의 수출기업 현지지사 대행(4천개사), 시장조사·마케팅 등 현지 애로해소 지원(5천건)
- (판로) 중소기업 참여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·투명성 개선 추진
 - 직접생산 확인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 ('22.4~)하고, 공공기관 구매실적 전수조사*,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** 일몰제 도입
 - * (기존) 30% 내외 무작위 조사 → (개선) 전수조사,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
 - ** 공공기관에 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을 중기물품 구매액의 15% 이상 구매

2 [자금공급]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자금 184조원 공급

- (전용프로그램) 중소기업, 소상공인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('21. 182.5 → '22. 183.8조원)

중소기업·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 계획(조원)

| | 중진공 | 신보 | 기보 | 무보 | 소진공 | 지신보 | 합계 |
|---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|
| '21년 실적 | 6.0 | 56.1 | 25.5 | 66.6 | 3.8 | 24.5 | 182.5 |
| '22년 목표 | 5.1 | 55.1 | 24.8 | 67.0 | 7.0 | 24.8 | 183.8 |

- 특히, 중진기금을 통해 기술·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등에 5.1조원 규모 장기(5~10년)·저리(1.85~2.65%)로 융자 지원*
 - * 한국판 뉴딜(3.2조원), 혁신성장(0.9조원), Net-Zero 유망기업(0.12조원) 등 중점
- 수은 등을 활용한 수출·혁신성장 관련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강화*
 - * (수은) 수출형 혁신성장 기업 금리 우대, 대출한도 확대 등
- (만기연장·상환유예) 소금융권 만기 연장·상환유예 일몰 ('22.3말)에 대해 보완조치*를 준비하고, 추가 연장 여부 검토
 - * 1) 유동성 부족 겪는 중소기업 등 대상 2조원 규모 전용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신설(산은)
 - 2)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등 대상 기업별 신용도·상환여력을 고려한 채무구조 개선·조정 등 맞춤형 연착륙 방안 마련

- **(채권관리)** 안정적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'상환 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' 확대 시행 ('22. 1,375억원 규모)
* 중소기업은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중진공, 신기보에 양도하고 판매대금 조기 회수

3 [맞춤형 인력] 기업·인력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 조성

- **(유입)**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인력 양성·채용
 - 中企계약학과 확대* + 특성화고, 마일리지제** 등 산학협력 인력양성 강화
* 대학-기업-학생 간 계약에 따른 학위과정: (중기부) ('21) 48개 대학 70개 학과→('22) 49개 대학 78개 학과, (교육부) 조기취업형 ('21) 13개 대학 28개 학과→('22) 15개 대학 45개 학과
** 산학협력 참여 기업-대학에 '산학협력 마일리지'를 부여→정부 지원 시 가점 우대 등 제공
 - AI 등 신기술 관련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확대 운영
*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인 K-Digital Training 확대 ('21. 1.7→'22. 2.85만명)
** 기업현장 재직자 대상 AI 융합형 인력양성 교육 실시('21. 1,280→ '22. 2500명)
 - 일정 점수요건을 충족한 유망산업(IT, 바이오, 신소재 등) 종사 외국인에 직종제한 없이 취업을 허용* 하는 전문취업비자 신설 ('22.上)
* (기존) 사전 허용된 직종만 취업 → (개선) 단순노무, 일반사무직 등 제외하고 자유롭게 취업
- **(인센티브)** 기업의 인력유지를 위한 각종 유인을 제공
 - 일자리 안정자금(0.5조원)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,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속 지원('22. 36.7만명)
 -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사업주 부담 경감* 등을 위해 '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' 도입 ('22.4)
* 저소득 근로자(최저임금 120% 미만)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일부 지원('22. 31억원)
 - 성과공유제* 관련 세액공제 확대(10→15%) 등으로 도입기업 10만개 추진('22)
* 기업의 경영성과를 성과급, 스톡옵션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공유하는 제도(~'21.12. 7.2만개사)
 - 교통이 열악한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* 1년 연장 ('22.1)
* 교통비(월5만원/연최대 60만원) 월평균 15만4천여명에게 총 923억원 지원 예정('22)
- **(중대재해처벌법)** 현장안착을 위한 컨설팅, 공정·장비 개선 등 지원 확대
 - ▶ (컨설팅) 사고성 재해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기관 등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진단·컨설팅 지원* 대폭 확대('21. 696→'22. 914억원)
* 사고성재해 집중관리(위탁): 29만회 /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: 2천개소
 - ▶ (교육·홍보) 법령 해설집 및 가이드라인 등 홍보, 업종별·지역별 설명회 개최 등
 - ▶ (재정) 고위험업종 위험 공정·장비 개선을 위한 보조(50~70%)·융자 확대('21. 7,501→'22. 8,072억원)
* 클린사업장 조성지원('21. 4,273→'22. 4,509억원): 제조·서비스업 4천개소, 건설업 8.9천개소 등 산재예방시설 융자('21. 3,228→'22. 3,563억원): 사업장 2.2천개소(1.5%, 10억원 한도)

V. 향후 계획

- 중기부 장관 주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10대 분야 중점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

| 10대 분야 추진과제 | | 추진일정 | 담당부처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환경변화 대응 | ① 글로벌 공급망 | '22.1월~ | 기재부, 산업부, 해수부, 중기부, 금융위, 조달청 |
| | ② 탄소중립·ESG | '22.1월~ | 기재부, 산업부, 환경부, 고용부, 중기부 |
| | ③ 상생협력 | '22.1월~ | 산업부, 중기부, 공정위 |
| 성장기반 확충 | ① 디지털 전환 | '22.1월~ | 과기정통부, 산업부, 해수부, 중기부 |
| | ② 연구개발 | '22.1월~ | 과기정통부, 산업부 중기부, 특허청 |
| | ③ 구조개선 | '22.1월~ | 기재부, 산업부, 고용부, 중기부, 금융위 |
| | ④ 지역 혁신 | '22.1월~ | 산업부, 중기부 |
| 경영여건 개선 | ① 수출·판로 | '22.1월~ | 기재부, 산업부, 해수부, 중기부 |
| | ② 자금공급 | '22.1월~ | 기재부, 산업부, 중기부, 금융위 |
| | ③ 맞춤형 인력 | '22.1월~ | 기재부, 교육부, 법무부, 산업부, 고용부, 중기부 |